

## “미군 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에 있다”

### 대법원 첫 판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 평시상 태 때는 주한미군 군속(軍屬)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군속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미군 당국은 군속의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형사재판권과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에 규정된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며 피고인에게는 SOFA에 명시된 미군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속(軍屬)=군무원(軍務員), 군인이 아니면서 군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수렵금지구역 오인사고 보험금 지급하라”

### 광주고법 판결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광종훈)는 22일 수렵도중 오인 사고로 70대 노인에게 중상을 입힌 박모(47·나주시)씨에 대해 S보험측이 제기한 ‘보험금 채무존재 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상 보험금 지급기준인 ‘수렵장 내 사고’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 사고’로 해석할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 가해자 박씨의 보험해당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범죄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해 고의 또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사고지점이 도로법상 수렵금지구역인 ‘도로로부터 600m 이내’에 속해 사실상 불법수렵이 이뤄진 점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면책사유로 들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부(不)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논란

## 광주·전남 6개교 등 9월부터 시범 실시

### “교육기회 제공” “사교육비 폭등” 찬반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9월부터 2년간 광주와 전남 6개교 등 전국 50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영어 시범교육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교육당국은 교육기회 형평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 단체 등은 사교육 조장과 정체성 혼란 등을 이유로 영어 조기교육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이다. 교육부는 22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광주는 본촌·선창·영두 등 3개교, 전남은 나주중앙·영광·해남동 등 3곳이다. 이들 학교는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간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당국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 ■ 세계 각국의 영어교육 시작 연령

시작 연령	국 가
4~5	파키스탄
5~6	스리랑카, 예루사렘, 홍콩
6	남아공, 방글라데시, 이집트연합
6~7	러시아, 멕시코, 크로아티아
7	인도
8	아르헨티나, 에디오피아, 오스트리아
8~9	한국, 리비아, 스페인
9	그리스, 바레인, 터키
9~10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체코, 키프로스
10	수단, 대만, 폴란드
10~11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11	콜롬비아, 헝가리

74%의 초등 1, 2학년생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이 끝난 뒤 2008년 하반기에 초등 영어교육을 전체 1, 2학년으로 확대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은 조기 영어교육은 사교육조장과 과도한 학습부담, 영어 외 인성교육 등 다른 교과와 교육에 대한 경시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박선화 사무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초등 영어교육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지역·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초등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물론 유아교육까지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초등 조기 영어교육은 사교육 조장, 모국어 교육 위축, 언어 및 정체성 혼란 등 심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정근 정책실장은 “초등 영어교육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공식 평가도 없이 이를 초등 1, 2학년까지 도입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초등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시범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교사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 물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범교육 강행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교육연대’ 최은순 정책실장은 “조기 영어교육 강행은 현 정부가 공언해 왔던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와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아직 우리말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조기에 영어를 가르칠 경우 ‘국적 없는 아이’가 양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단비에 ‘모내기 준비’ 한창

방기상청은 예보했다.

광주·전남지방에 최고 30mm 내외의 단비가 내린 22일, 회순 들녘에서 농부들이 모내기 준비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비는 23일 낮부터 갠 것이라고 광주지

/회순=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정당 가입한 공무원 7명 기소

## 검찰, 77명 추가조사... 무더기 징계 불가피

특정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22일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화순군청 공무원 A씨(39) 등 화순군, 나주군, 곡성군 공무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입당원서를 공무원 명의로 위조해 당에 제출한 혐의(선거법위반) 지역별로는 화순군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모 정당 당원 모집인 M(47)씨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 기소된 공무원들은 지인과 친인척 등의 입당 권유를

받고 정당에 가입했으며, 일부는 직접 당비까지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화순군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와 곡성군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직급별로는 7급 공무원이 4명, 6·8·9급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정당 가입 사실이 없거

나 공무원 임용 이전에 정당에 가입한 B씨 등 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광주지검 외에도 모두 77명의 공무원들이 검찰의 조사(순천지청 36명, 목포지청 34명, 장흥지청 3명, 해남지청 4명)를 받고 있어 향후 무더기 기소 및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지검 이형철 공안부장은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우위를 잡기 위해 당원 모집인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까지 가입시키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예자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  
문의 (062)366-4220

노숙자 선원으로 팔아 1억여원 챙겨



○부산역 등 지하역 노숙자들에게 밥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뒤, 전남 도서지역 선원으로 팔아낸 거 돈을 가로챈 직업소개소 운영자들이 해명에 달미.

○목포 해양경찰은 22일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숙자 등 구직자를 해남과 신안, 진도 등 섬 지역의 인부와 선원으로 소개해 주면서 소개비와 선불금 등을 받아 쟁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57·순천시)씨를 구속하고 김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해명에 따르면 이들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구직자 104명을 대상으로 소개비 3천여만원과 업주가 선원에게 지급한 선불금 9천여만원 등 총 1억2천200여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또 ‘부산역 노숙자 대부’로 알려진 모집책 서모(50)씨의 뒤를 쫓고 있는데, 서씨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해 셋새우잡이 선주들로부터 1인당 60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인계한 후 선불금 등을 챙겨 달아났다고.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 '선택' 5·31 지방선거... 인터넷 광주일보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를 클릭하시면 지역의 미래가 열립니다  
후보자마다 인터넷 광고 해도... 선거운동기간에도 계속 접수 받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은 선거권 유무와 투표권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인터넷 선거광고

선택 5·31 지방선거

광주일보 인터넷 선거광고

www.kwangju.co.kr

선택 5·31 지방선거

광주일보 인터넷 선거광고

선택 5·31 지방선거

광주일보 인터넷 선거광고

선택 5·31 지방선거 | 062)227-9600